

특허청은 「민간중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생태계 조성」을 내년의 민·관 협력 방향으로 제시하면서, ①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소회의체 활동을 강화하고 ②상표권자와 온라인매개(플랫폼)가 위조상품 유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자용 통합신고센터 개설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.

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“위조상품의 유통은 ①정당한 권리자 및 소비자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②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③국내 기업의 상품개발 의지를 꺾고 나아가 ④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행위”라면서

“민·관 전문가 인력이 긴밀히 협력하는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의 의미가 매우 큰 만큼 「민간 중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생태계 조성」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협의회 가입은 지식재산침해 일괄(원스톱) 신고상담센터(1666-6464)로 문의하면 된다.

※ 붙임1: 2023년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성과공유회 배너

붙임2: 2023년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성과공유회 일정

붙임3: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회원

담당 부서	산업재산보호협력국 상표특별사법경찰과	책임자	과 장	박주연 (042-481-5959)
		담당자	서기관	신훈식 (042-481-8315)

